

한국정치학 소고: 『한국정치학회보』에 나타난 한국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김홍우*

이 글은 『한국정치학회보』에 나타난 한국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 연구경향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한국정치학의 토착화, 구체분석, 자기반성을 위한 다양한 문제제기와 연구를 수행해왔고 또 실제적인 성과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첫째, “이론의 파악화” 현상과 “한국현실의 왜소화” 현상을 드러내고 있으며, 둘째, “소통의 부재” 현상과 이로인한 “한국정치학 발전의 지체” 현상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 있다. 전자는 한국의 정치학이 한국의 현실로부터 출발하기보다는 외국의 이론과 사례로부터 출발했음을 나타내며, 후자는 한국의 정치학이 소통 및 논쟁의 부재로 말미암아 동일한 문제의식과 내용을 무한반복함을 나타낸다.

향후 한국정치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을 위해서는 첫째, 그동안의 한국정치학 연구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 진지하게 재평가하여야 한다. 둘째, 이 과정에서 그동안에 지적되어 왔던 이해의 결여 혹은 소박성을 타파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치학은 소통의 부재현상을 극복해야 한다. 동일한 문제의식과 동일한 작업의 무한반복이라는 한국정치학의 소모전은 상호간의 토론과 논쟁의 부재현상의 극복 속에서만 종식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社會科學의 韓國的 패러다임 定立을 위한 基礎研究”의 일환으로 쓰여진 것이며, 논문의 작성에 있어서는 특히 유범상군과 이병택군의 기초자료수집과 정리에 힘입은 바 크다.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전공분야: 정치철학

주요논문: “민병태 『정치학』의 이해: 슈미트와 라스키의 논의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1997)

연락처: 전화: 880-6337

팩스: 887-4375

본 논문은 한국정치학계의 성과와 향후의 발전방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아울러 한국적 패러다임의 정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위해 〈한국정치학회보〉에 실린 한국 관련 논문들을 검토하였다. 〈한국정치학회보〉에 소개된 한국 관련 논문들은 크게 보아 한국 정치에 관한 이론과 한국 정치에 대한 분석으로 구분된다. 한국 정치 분석의 경우, 토착화를 위한 다양한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논의들의 대부분은 첫째, ‘이론의 과잉화’ 현상과 ‘한국현실의 왜소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논문 지면의 배분에서도 드러난다. 즉 이론이 논문 내용의 대부분을 점령하고 현실은 그 이론의 호명에 의해 마지못해 끌려 나온다. 그리고 한국의 현실이 묘사될 때 조차도 그 이론의 틀에 적합한 사례만이 취사선택될 뿐이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서 ‘한국의 현실보다는 외국의 이론 소개에 치우친 논문’과 ‘한국의 현실을 이론에 째어 맞춘 논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소통의 부재’ 현상과 이로 인해 ‘한국 정치학 발전의 지체’ 현상이 나타난다. 소통의 부재는 동일한 문제의식과 비슷한 수준의 분석이 무한 반복되는 결과로 귀결된다. 이로인해 살아있는 한국의 현실을 다루기 보다는 ‘이론의 소개’ 또는 ‘이론의 틀에 갇힌 현실’이라는 한국 정치학의 한계를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 이와 관련된 사례로서 ‘저자들간의 소통의 부재를 나타내는 논문’과 ‘자신의 글을 발전시키지 않은 논문’을 분석하고자 한다.

셋째, 이상의 문제제기를 살펴본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한국 정치학의 발전을 위한 방향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1. 과잉화된 이론과 과소화된 현실

〈한국정치학회보〉에 나타난 한국 정치학의 첫번째 특징은 ‘이론의 풍성함’과 ‘현실의 빈약함’이라는 현상이다. 이로 인해 한국 정치학은 한국의 이야기 보다는 외국의 이론에 대한 이야기, 한국의 현실보다는 외국의 사례 분석에 치중해 왔으며, 그 결과 한국의 정치학은 자신에 관한 얘기가 없이 남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찬 한국이 빠져 버린 한국 정치학이었다는 생각이 듈다.

1) 한국의 ‘현실’ 보다는 외국의 ‘이론’ 소개에 치중한 사례

우선 한국의 현실을 설명하려는 의도로 쓰여졌으나 실제는 이론에 대한 소개로 끝남으로써 원래의 목적에 충실치 못한 논문들이 발견된다. 「제3세계 발전에 대한 정치리더쉽 접근 시론: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하여」(25-2, 1992, 193쪽-221쪽), 「분배정의와 평등: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분배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논의」(25-2, 1992, 57-85쪽) 등은 이것의 전형적인 사례이다.

전자의 글은 “제3세계국가의 발전문제를 연구하는 새로운 시도로서 정치리더쉽 접근에 관한 시론을 쓰는 것”(194쪽)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실제로는 한국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따라서 “한국의 발전경험에 대한 새로운 이해”라는 제목의 부제와 같은 문제의식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독자의 뜻으로 넘겨두고 있다. 후자의 글은 전자의 글에 비해서 한국의 문제를 언급한다는 점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우선 저자는 이 논문의 목적이 “순수 이론적 차원에서 분배정의와 평등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정치에 있어서 분배문제 해결을 위한 시론적 시각을 제시”(58쪽)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글은 ‘정의의 개념, 주요이론가들의 정의이론 분석, 분배정의의 개념화, 평등의 개념화, 분배정의와 평등간의 관계’ 등을 장황하게 설명한 다음 마지막으로 ‘한국정치에서의 분배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제안’을 덧붙이고 있다. 하지만 마지막의 논의는 총 28쪽 중 2쪽에 불과하며 2쪽 조차도 한국에 관련된 것이라기 보다는 일반적인 윤리적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통합과 정치발전」(11, 99-114쪽)과 「도시정치학의 접근법과 한국의 도시연구」(21-2, 363-377쪽)는 부제가 아닌 원제목에서 한국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대표적인 논문이다. 전자의 경우, 제목 이외에는 한국이라는 용어 자체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 한국에 대한 논의는 발견되지만 논문의 말미에서 인사치례로 언급될 뿐이다. 그러나 「분배정의와 평등: 한국 정치에 있어서의 분배문제 해결을 위한 이론적 논의」(25-2)와 비교해 보면, 한국의 현실적용에 보다 적극성을 띠고 있음을 분명하다.

「도시정치학의 접근법과 한국의 도시연구」는 서론에서 “우리나라 도시율이 70%

에 이르렀고 서울은 물론 지방대도시들도 이미 성장하여 대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시행이 머지않아 시행되면 명실상부한 지방화시대가 전개될 것이 명백하게 되었다. 지난 20여년 간의 도시의 성장은 산업화에 그 주된 연유가 있지만 도시에서 발생하는 상황은 산업의 효과분석이나 인구문제의 연구만으로는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분석에 의해서 연구되지 않으면 안된다”(364쪽)고 적고 있다. 하지만 서론의 심각한 문제제기와는 달리 본론에서는 외국 논자들의 도시정치학 이론을 소개하는데 대부분의 지면이 할애된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는 2쪽만을 할애할 뿐이다(2쪽과 17쪽). 그럼에도 불구하고 2쪽의 논의는 한국의 도시정치학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우리나라 도시는 정치학적 접근의 중요 대상이 되지 못했다. … 도시는 중앙정부의 가치를 실현하는 행정단위이고 시장은 정치나 정당과는 무관한 순수 행정관료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도시가 도시문제나 도시화의 진행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며 문제의 초점은 지난 30년간 변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에는 국가적 발전, 도시의 물리적 건설, 효율성 그리고 국가적 통합 등의 가치를 강조하였으며 1970년대에는 경제발전의 사회발전, 근대화와 도시화에서 발생하는 부수적 과제의 처리, 도시 농촌간 불균형의 해소, 조화있는 발전 등이 강조되었고 1980년대에 들어서 특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균등한 분배의 정의, 시민의 참여와 민주주의적 결정 등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열망이 동등하게 나타나고 있다. …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 도시행정은 도시문제 해결의 주역이 아니었고 도시 정책 수립의 담당자도 되지 못하고 중앙정부의 위임사무와 도시체제의 유지를 위한 자질구레한 일들을 결정하는 조직에 불과한 것이었다. … 도시정부 뿐만 아니라 도시시민들도 도시정부에 대하여 압력정치를 전개하지도 못했다. …

그러나 도시가 성장하여 중산층주민의 수가 늘어나고 교외화과정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민간부문의 확대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이들의 기능이 증대 됨으로써 각종의 이해관계가 분화되어 유효한 도시정부의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하기에 이르렀다(375-6쪽).

이처럼 이 글은 한국의 도시정치학에 대한 문제제기와 발전방향에 대해 비교적 뚜렷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으나 이 논문 역시 한국을 연구해야 한다는 총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른 하나의 예로는, 「한국적 행정이론의 성립가능성 모색」(21-2, 1987, 153-174쪽)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은 그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적인 것에 대한 “모색”에 그치고 있다. 저자는 한국적 행정학의 정립에 있어서 무엇이 문제이고 중요한 것인지를 알면서도, 정작 그 문제를 연구대상으로 전면에 부각시키지 못하고 논의의 주변에서 “문제의식” 정도로 표출시킬 뿐이다:

… 조선조의 관료제는 한국행정학을 성립시키는 데 뿌리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본래 조선조의 관료제는 고려시대 중국에서 들어 왔던 것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 風土에 적응되면서 변형·재창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대에 벌써 이렇게 세련된 관료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값진 문화유산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였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조선조의 관료제는 오늘의 관료제를 새롭게 하는데 여러 가지 아이디어의 원천이 될 수 있다. 該 관료제는 국민을 위한 행정장치는 아니었으나 조직자체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세련된 장치를 구비하고 있었다. 무엇보다도 왕이나 특정기관의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견제장치를 통해서 행정의 공개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왕은 사관의 입회 하에서만 신하를 접견할 수 있었고 사관의 기록을 볼 수 없어 사필의 공정성을 살릴 수 있었음). 또 참여적 정책결정을 제도화하였고 아래로부터 여론을 수렴하였고 왕족의 권력접근을 막았다. 이러한 전통적 유산들은 오늘의 우리 관료제를 재정립하고 새롭게 하는데 큰 밑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165쪽).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해 보면, 앞서 언급된 논문들은 그것이 한국에 대해 언급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실은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귀퉁이에 미미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부류의 대부분의 논문들은 한국의 현실에 대해 설명하고 싶은 의도는 있으나 외국의 이론을 소개하는 쉬운 길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쉬운 길로의 행진은 한국의 정치학자들에게 지속되었다는 생각이 든다.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적 통합과 정치발전」(11호)은 비록 짧게는 언급되고 있지만 본 논문 주제와 관련하여 한국의 상황 및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과 좋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한국의 현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채로

논문을 끝맺고 만다.

둘째, 이러한 현상을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할 때, 이론의 부재라는 한국적 현실에서 한국을 설명하기 위한 선구적 정신의 발로로 풀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러한 이론들이 한국의 현실에 적용되는데 있어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보다 표출되었어야 했다. 즉 한국의 현실 내부로부터 이론의 적용을 고민하거나 또는 기존에 제기된 이론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했어야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글들은 새로운 이론의 수입과 그것에 대한 설명만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논의들을 망각했거나, 새로운 이론과 한국의 현실 간의 연관성을 논하는데 있어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는 느낌을 준다.

셋째, <한국정치학회보> 전체를 통틀어 볼 때 앞서의 문제제기들이 이후에 저자 또는 다른 학자들에 의해 계승·발전되지 못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한국정치학회보>가 아닌 다른 지면을 통해 이것이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한국정치학회보>가 보여주는 사실은 하나의 좋은 문제제기가 다른 학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했거나 하나의 좋은 논문이 다른 논자들에 의해 확장·발전되지 못한채, 그대로 사장되었다는 것이다.

2) 한국의 현실을 이론에 끼어 맞춘 사례

이제 외국의 이론을 보다 적극적으로 한국적 상황에 적용한 사례에 대해 논해 보기로 하자. 대다수의 논문들이 이러한 범주로 분류될 수 있는데, 「관료적 권위주의의 한국적 생성」(17, 1983, 341-362쪽)과 「지방자치제하에서의 수도의 법적지위 및 기능배분에 관한 비교연구」(27-2, 1993, 215-244쪽)의 글을 중심으로 살펴보자.

전자의 글은 외국의 이론을 구체적으로 한국에 적용한 사례이다. 저자는 “O'Donnell의 새로운 관점을 빌어 ‘유신체제’의 관료적 권위주의가 생성되는 과정을 논하려고 한다. 이것은 관료적 권위주의의 이론모형을 한국적인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그 적실성을 알아보는 일이 될 뿐만 아니라, 관료적 권위주의의 한국적 생성이 가지는 특성을 규명하는 노력”(342쪽)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관료적 권위주의의 요건을 나열하고(경제 및 사회변화의 주요한 3국면 — 산업화, 민중부문의 활성화, 기술관료의 역할 — 과 정치변화의 3차원-정권의 구조, 지배층의 계급동맹, 공공정책; 344쪽), 이것을 한국의 현실에 기계적으로 적용한다. 저자는 논문의 말미에서 한국적

상황과 남미의 상황에 대한 차이를 나열적으로 지적하기는 하나, 이미 만들어진 ‘관료적 권위주의’라는 조건 속에서만 한국의 상황을 들여다 본다.

후자의 글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주요국가들이 각각 수도에 어떤 특수한 지위와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는가, 아니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동등한 자치권을 부여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살펴보고 이것을 서울시와 비교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밝힌다. 그러나 실제의 연구는 서울시와의 비교보다는 다른 나라 수도의 법적지위 및 기능배분에 관한 설명과 일반이론의 정립에 논문의 대부분을 할애한다.

결론적으로 서울은 일반론적인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이 위치지워진다. 즉 “수도의 법적 지위를 수도에 배분되는 기능의 범위와 관련시킬 때에는 I형(관치형), II형(분권적 관치형), III형(유사관치형), IV형(자치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체로 I, II형은 연방국가의 수도들에 속하며, IV는 일부 연방국가와 대다수 단일국가의 수도들로 분류된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지위가 부여되어 있지만 자주적 기능이 극히 협소하기 때문에 III형에 속한다”(241쪽).

이처럼 이 논문에서 대한민국 수도에 대한 관심은 이미 만들어진 틀이 완성된 다음에 비로소 생겨나는 듯한 인상을 주며, 여기에 덧붙여 필자의 평상시 서울에 대한 인상을 바탕으로 자신이 만든 이론적 틀에 서울을 편입시킴으로써 서울에 대한 논의는 종결된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은 순서에 따른다. 우선 대부분의 글들은 외국의 이론과 사례로부터 출발하여 비교의 범주, 유형, 이상형(ideal type) 등이 정해진다; 그런 다음 상식적인 선에서 한국의 현실에 대한 얇은(thin) 묘사가 이어진다; 이것은 많은 지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 다음 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정해진 지도 즉 특정한 범주와 유형 속으로 집어 넣는다; 그리고 논문은 종결된다. 이처럼 한국의 현실은 정형화된 외국의 현실과 그 이론 속에서만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간혹 일정한 차이가 발견되면 그 상이함은 심도있게 연구되지 못하고 핵심의 주변부에서 단순히 지적되고 지나갈 뿐이다.

2. 소통의 부재와 지연된 발전

정치학회보의 한국관련 논문들의 두 번째 특징은 저자들간 소통의 부재, 논쟁의

부재현상이다. 더욱이 정치학회보에 실린 기준의 논문을 서로 참조했는지 조차도 의심스러운 경우가 많다. 정치학회보에 나타난 글을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첫째는 중요한 문제가 정치학의 역사에서 이미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제기되지 않고 단순히 무시되거나 망각됨으로서 사라져버린 사실이며, 둘째는 동일한 주제가 계속되어서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나 이전의 글을 참조하지 않았거나 이전의 논의들과의 연속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마지막은 저자 자신이 자신의 글을 보다 진전시키지 못하는 경우이다. 이로 인해 한국의 정치학자들은 한국에 대해 동일한 문제의식과 내용을 무한반복했다는 생각이 듈다.

1) 저자들간의 소통 부재의 사례

중요한 문제제기들과 연구들이 이후에 논의되지 않았거나 언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전의 자료들이 언급되지 않은 사례들 중에서 몇가지를 살펴보면, 우선 「정부에 대한 어린이의 태도」(3, 1968, 223-240쪽)와 「정치사회화과정의 분석: 한국의 초·중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12, 1978, 277-290)는 초·중등학교 학생의 정치사회화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가정이나 학교와는 달리 공권의 주체인 정부를 어린 학생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경험적으로 분석한 글' (전자의 논문) 또는 '정치사회화의 의의에 있어 학생들이 어떤 정치적인 지식, 가치, 태도, 행동을 지니고 있는가에 대한 기술적인 면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체제이론이나 기능이론에 따라 정책적인 면에 치중하여 학생들의 정치사회화가 미래 정치체제의 기능발휘와 존속에 어떤 결과를 미칠까에 관심' (후자의 논문)을 보이고 있는 글이다. 그러나 이상의 좋은 문제제기의 글은 이후 학회에서 또다시 거론되지 않았다. 물론 그 후 「한국 대학생 및 고교생들의 민주의식과 안보의식에 관한 실증적 연구: 이념적 갈등을 중심으로」(22-2, 1988, 243-264쪽)가 발표되기는 했으나 분석대상이나 질문 자체가 상이한 것이었다. 이처럼 한국정치학회보는 홀륭한 주제를 활성화시키기 보다는 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사장시켜 온 것이다.

정치학에서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주제와 관련하여 세 편의 논문이 눈에 띈다. 「정조조의 천주학비판」(23-2, 1989, 430-454쪽)과 「우리나라 근대정치사상에 끼

친 기독교의 영향」(16, 1982, 45-60쪽) 그리고 「해방신학의 정치경제론: 남미와 한국의 비교분석」(23-1, 1989, 19-206쪽)인데 세 논문은 모두가 근대 정치사상과 현대의 한국정치에 끼친 기독교의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하지만 세 글 상호간의 논평이나 이 논평을 통한 기독교와 한국의 정치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노력은 부재했다고 보여진다.

정치학에서 엘리트, 지도자에 대한 분석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한국정치지도자 변천의 사회·경제적 추리」(18, 1984, 397-418쪽)와 「한국 정치엘리트의 구조분석」(30-2, 1996, 141-164쪽) 그리고 「한국지도층의 평등인식: 경험적 분석」(25-1, 1991, 273-300쪽) 등은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역시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외면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정치학에 있어서 전라도 문제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전라도 문제는 <한국정치학회보>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한국정치에 있어서 전라도」(20-1, 1986, 85-108쪽)는 그 중에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글은 이 문제를 간접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14대 대선에서 지역감정이 투표행위에 미친 영향: 전북지역 유권자를 중심으로」(27-1, 1993, 209-244쪽)와 「정치균열, 정당정치, 그리고 지역주의」(28-2, 1994, 215-238쪽)가 발견되기는 하지만 이 주제는 <한국정치학회보>에서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2) 자신의 글을 발전시키지 않은 사례

「대통령선거 아젠다 분석: 제13대 대선 잇슈를 중심으로」(24-1, 1990, 105-158쪽)와 「대통령선거 아젠다 분석: 제14대 대선 잇슈를 중심으로」(28-1, 1994, 205-236쪽)는 동일한 문제의식을 상이한 시기에 적용하여 분석한 글이다. 「한국선거에서의 세대요인」(26-1, 1992, 145-168쪽)과 「정치세대와 14대 국회의원선거」(28-1, 1994, 257-274쪽) 또한 세대요인을 한국의 정치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을 구체적인 선거에 적용한 글이다.

먼저 「대통령선거 아젠다 분석: 제13대 대선 잇슈를 중심으로」와 「대통령선거 아젠다 분석: 제14대 대선 잇슈를 중심으로」는 “선거 아젠다의 항목으로 분류된 각각의 잇슈들을 기본단위로 하여 잇슈의 성격, 정의과정, 다른 잇슈와의 관계, 잇슈의 변질과정, 잇슈 공방에서 나타나는 잇슈갈등, 잇슈주기, 잇슈 참여자의 잇슈제

기 및 반응전략을 분석”(24-1, 137)의 틀로 하여 13대와 14대 대통령 선거를 분석하고 있다. 우선 첫 번째 글이 기존의 연구에 비해 잇슈투표에 관한 논의를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잇슈들을 단순 나열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세련되고 심층적인 분석을 기대하게 했다. 그러나 두 번째 글은 범주와 내용에 있어 약간의 변형의 노력은 보이지만 대체로 첫 번째 글의 작업에 의거하여 14대 지형을 기계적으로 분석할 뿐 새로운 발전과 이전의 글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다. 특히 앞선 논의들을 참고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언급조차 하고있지 않다.

「한국선거에서의 세대요인」과 「정치세대와 14대 국회의원선거」는 투표행태 분석에 있어서 정치세대문제를 분석의 범주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선거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기했다. 그러나 두 글 간에 연관 및 발전에 대한 필자의 언급이 전혀 발견되지 않고 두 글간의 형식과 전개과정 그리고 내용을 다루는 방식 등이 차별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긴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서 볼 때 하나의 문제의식을 시차를 두고 대상을 달리하면서 동일한 틀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문발전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둘간의 연관과 평가가 존재하지 않고 전자의 글이 후자의 글에 비해 오히려 풍부하다는 인상은 자신들의 문제의식을 이후의 글에서 보다 진전시키지 못했다는 평가를 들을만 하다. 이것은 한국의 정치학이 과연 기존의 정치학 연구보다 얼마나 더 질적으로 발전했는지를 진지하게 반성하는 맥락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3. 정치학의 새로운 모색

1) 정치학연구의 성과

한국정치학은 첫째 50여년 동안 자기반성을 끊임없이 시도해 왔다. 「한국정치학의 분야」(2, 1967, 169-182쪽) 「한국정치연구의 경향과 평가」(12, 1978, 173-188쪽), 「한국정치학에서의 비교정치연구: 전개와 상황」(21-2, 1987, 111-132쪽) 등의 글은 이것을 잘 드러내고 있다.

첫번째 글은 “‘미국정치학자의 각분야별 분포상황’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

는 미국의 그것에 비하여 행정학 분야에 높은 관심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고 또 한국정치분야가 미국의 그것에 비하여 현저하게 무관심한 상태에 놓여있다”(173쪽)고 지적한다. 두번째 글은 “그동안 한국의 정치학은 연구주제의 선정과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자율성이 미흡하였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가발전에도 정치발전에도 크게 기여한 바가 없었다”(185쪽)고 비판한다. 마지막 글은 “제3세계연구에서도 2개 이상 5개까지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6.1%에 불과한 것은 제3세계 연구에서도 엄밀한 의미의 ‘비교’는 별로 적용되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131쪽)이라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비교정치학을 진단한다.

특히 한국정치학의 자기반성은 〈한국정치학회보〉의 편집방향에서도 드러난다. ‘한국정치학의 연구 및 교육방향의 검토’(1967)라는 제2집의 특집이나, 제11집의 연례학술발표 논문집의 주제가 ‘한국정치발전과 정치학’(1977), 그리고 12집의 ‘전국30년의 한국정치학’(1978), 제13집의 ‘한국정치학의 정립문제’(1979), 제14집의 ‘80년대 한국정치학의 과제’ 등은 한국정치학의 자기반성의 시도라고 볼 수 있으며, 특히 1997년 여름에 개최된 제17차 세계정치학회(IPSA) 서울대회는 보다 넓은 맥락에서 이러한 반성을 가능하게 했다.

둘째, 구체분석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왔다. 「한국의정사에 나타난 민권에 관한 연구: 1950년 ‘민권법안’의 사례」(8, 1974, 63-86쪽), 「한국의 정치문화와 정치발전: 서울시 저속득층 정치성향의 한 단면」(11, 1977, 114-134쪽), 「한국인의 정치의식구 조변화: 1963년과 1978년」(14, 1980, 89-104쪽), 「국회위원회 처리안건 분석」(25-1, 1991, 159-188쪽), 「의회신뢰의 차원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지역언론인에 대한 태도조사를 중심으로」(25-1, 189-206쪽), 「지역사회의 힘의 범주에 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 진주시외버스 터미널 이전 문제를 중심으로」(27-2, 1993, 261-290쪽), 「우리나라 도시중산층의 정치경제적 행태와 사회안정: 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 등 5개 대도시 중류생활자들을 대상으로」(28-1, 1994, 81-100쪽), 「정책혁신으로서 행정정보공개조례채택」(28-1, 1994, 101-122쪽),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규제정책 입안동기: 한국 토지정책의 사례를 중심으로」(28-1, 1994, 483-506쪽), 「다자간 무역 협력체와 쌍무적 통상협상: 한국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전략」(28-2, 791-810쪽) 등 이러한 예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셋째, 한국의 정치학은 토착화를 향한 끝임없는 문제제기를 해왔다. 「비교정치학의 20년의 반성」(2, 1967, 7-28쪽), 「한국행정학의 현황과 역할」(2, 1967, 112-132

쪽), 「한국정치학의 과제」(5, 1971, 5-12쪽), 「민주주의의 토착화」(8, 1974, 33-40쪽), 「한국에 있어서의 정치학의 발전」(11, 1977, 39-49쪽), 「한국정치학의 정립방향: 정치이론의 경우」(13, 1979, 3-12쪽), 「한국정치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28-1, 1994, 7-6쪽) 등의 글은 이것을 잘 보여준다.

「비교정치학의 20년의 반성」은 “입법정치의 경험을 갖지 못한 한국의 풍토에 외국제도를 이식하고 모방하는 것만을 일삼았던 한국의 정치실제가 시행착오의 과정을 되풀이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소개된 정치학도 내 나라의 정치현상을 과학적으로 다루기 위한 주체적 계기를 갖지 못했다”(7쪽)고 지적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토착화」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 현재로 우리는 ‘민주주의의 토착화’가 원칙적으로나마 가능한지의 여부를 아직 확실히 모르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 자체내적 제반속성에 관한 충분한 자기지식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과 또 우리가 아직 ‘민주주의’라는 현상에 관하여 충분한 지식을 갖고 있지 못한 때문”이라고 비판하면서 한국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토착화의 가능성을 문제삼고 있다. 「한국정치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는 현실과 정치학의 괴리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대다수 학자들은 보수논리와 경험분석에 치중했고 진보논리와 실천이론에 대해서는 소극적이었으며 경험적 분석에서도 실존문제는 배제했다. 요컨대 60-80년대에 있어 한국의 정치학은 … 걸러지지 않은 외국이론을 안이하게 적용하는 것이 통례였다. 한편 진보적인 소장학자들은 … 이념적 편파성과 시각적 편협성을 노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한국정치학은 현실과의 괴리를 확대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정체성의 위기를 가중시켰으며 양적 성장과 비교할 때 질적인 발전은 상대적으로 지체될 수밖에 없었다(23쪽).

넷째, 실제로 한국적 정치학의 토착화를 위한 노력도 엿보인다. 「한국민주주의 서설: 토착적 민주주의, 개념, 형성을 위한 하나의 시론」(4, 1969, 5-40쪽), 「한국민주주의의 이념정향: 새로운 이념정립을 위한 하나의 시론」(8, 1974, 11-32쪽), 「전후 한국민족주의의 문제상황」(10, 1976, 203-212쪽), 「한국정치문화의 기본요인」(16, 1982, 97-120쪽) 등의 글은 한국의 정치학 연구를 한국으로부터 시작하려는 시론적인 연구들이다.

첫 번째 글은 부제에서 보듯이 토착적 민주주의를 위한 시론적 성격의 글이다. 이글은 “만일 구미적인 민주주의가 한국땅에 실현되는 것이 상당한 시기 동안 불가능한 것이라면 한국의 주어진 여건과 현실속에서 민주주의 이념과 제도를 현실화하고 토착화하는 길은 없는 것일까?”(5-6쪽)라는 문제제기와 이것에 대한 시론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이 글의 결론은 “한국의 민주주의는 서구민주주의, 동방민주주의, 신생국민주주의 등 어느 유형하고도 동일할 수 없다는 것과 서구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를 가장 많이 흡수 동화하되 각 민주정체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취사선택한 자율적인 성격과 형태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7쪽)하다는 것이다. 세 번째 글은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쓰여진 하나의 서설”(203쪽)로서 “한국 민족주의가 안고 있는 제문제 가운데 그 개념, 그 사상, 그리고 그 담당세력에 대한 가설적인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무엇이 문제인지를 표출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그것을 검증하고 설명하는 작업은 금후의 과제”(204쪽)라고 서술하고 있다. 연구결과 민족주의에 대해 “개념의 불명확성, 사상의 즉자성 그리고 담당세력의 불확실성”(211쪽)이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적 정치학의 토착화를 위한 연구는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며 문제제기적 성격에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이들 글이 토착화를 위한 시론인 만큼 이후의 글들은 이것을 논쟁에 부치고 발전시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치학회보>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진지하게 다루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2) 한국정치학 연구의 반성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의 정치학은 자기반성과 구체분석 그리고 토착화를 향한 문제제기 및 토착화를 위한 실제적인 노력을 강화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정치현상에 대한 구체분석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이와 아울러 한편으로 이론에 대한 다양한 소개 또한 증가해 왔다. 필자는 이 두 가지 현상 즉 구체분석 및 이론의 증가현상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즉 한국의 정치학은 한편으로는 정체성에 대한 자기반성과 한국의 현실에 천착함으로써 토착화를 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를 지속적으로 전개했고 실제로 구체분석을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외국의 이론을 통해 한국의 현실을 들여다보려는 기존의 태도를 조금도 약화시키지 않았

으며, 오히려 더욱 강화시키려는 경향마저 나타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구체분석은 이론의 범람과 홍수속에서 그것들의 틀에 빠져 맞추어지기가 일 수 있다. 결국 대부분의 글들이 정확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했으나 현실에 대한 빈약한 연구 때문에 한국 정치현실의 문턱에서 주저 앉았다고 평가된다.

이상과 같은 현상이 한국의 정치학의 역사를 통해 무비판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데는 정치학자 서로 간의 그리고 학제간의 소통의 부재 현상에서 주요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국정치학회보>는 ‘소통과 논쟁의 부재’ 현상과 ‘한국정치학 발전의 지체’ 현상 간에 높은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기존에 제기된 문제나 선구적인 업적들은 단지 1회적인 것들로 재론되지 않았으며, 또한 동일한 주제와 문제제기가 논의될 때조차도 이전의 글들은 언급조차되지 않았으며 뿐만 아니라 이전의 글에 나타난 논의의 한계는 종종 간과되었다. 따라서 한국정치학의 정립을 위한 문제제기는 끊임없이 넘쳐 났으나 실제 연구는 앞선 논의가 넘어서지 못했던 지점에 이르러 계속적으로 종결되고 말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한국정치학은 정치학 도입 초기부터 제기된 ‘과잉이론화와 과소화된 현실’ 및 ‘소통의 부재와 지체된 발전’이라는 특징을 보여주었다.

3) 한국적 패러다임 정립을 위하여

이상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정리하면서 정치학분야에서 한국적 패러다임 정립을 위한 대안을 모색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정치학은 자기 반성과 자기비판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반성은 오늘날 우리의 문제제기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민주주의, 민족주의, 정치의식 등의 한국 정치학의 토착화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자기비판에 대한 재검토·재음미가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의 문제의식의 만남을 주선할 수 있으며 한국 정치학 비판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통찰에 도달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앞선 문제제기들과 함께 한국의 정치학이 쌓아온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평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새로운 한국의 정치학은 그동안에 축적된 자료 더미에서 이미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며, 실제로 새로운 한국적 패러다임 출현은 새로운 이론에 의한 대체가 아니라 기존 이론의 분석과 분류 그리고 연

결 속에서 이미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한국의 정치학은 실제로 많은 문제제기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정치학을 위한 자료와 연구를 축적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수렴하려는 노력이 우선 필요하다. 즉 이전의 이론들은 한국의 현실을 일정정도 수용하려는 노력들이었으므로 새로운 한국적 패러다임의 정립이라는 미명하에 기존의 것을 쉽게 포기한다면 한국의 정치학은 단순반복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 그동안의 한국의 정치학은 이론으로부터 시작하여 한국의 정치적 실체에 도달하거나 이론적 소개를 통해 한국의 정치를 상상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그 역의 과정 즉 한국의 현실로부터 정치이론, 정치철학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진술이 이론의 경시를 의미하거나 이론을 통해 한국을 설명했던 기존의 노력들을 소홀히 해야 함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국 정치학의 이론들은 단지 이론으로 소개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현실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이다. 행태주의나 정치문화론적 접근 그리고 과대성장형 국가이론이나 관료적 권위주의 모델 등은 모두 한국 현실의 설명과 발전을 위한 지침이었다. 따라서 그 이론과 설명은 일정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의 이론과 그 이론과 연결된 한국의 현실을 재음미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그동안의 논의들을 살펴볼 때 무엇보다도 “이해”의 결여 혹은 소박성이 산재해 있다고 생각된다. 이해의 소박성에 대한 원인은 대체로 두 가지로 집약된다: 1) 많은 논문이 자신의 연구대상을 적절하게 다루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때로는 연구대상은 없어져 버리고 방법론만 난무하기도 했다. 연구대상에 대한 記述이 지극히 미비한 상태에서 단순한 비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성과의 축적과 이해의 심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방법론은 연구대상을 심도 있게 다루는 능력으로, 다시 말해 대상을 주체적으로 다루는 능력으로 과악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대상을 단순화시켜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단선적인 기술로서 이해되고 있다; 2) 한국사상사의 경우 지나치게 “민족적인 것”을 “서구적인 것”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인해 ‘著者’의 자율성이 결여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때로는 “서구적인 것”을 모델로하여 “우리의 것”을 재단하려는 경향으로 말미암아 주체성의 결여가 두드러진다. 이런 이유로 “과거”는 우리의 이해를 확장시키는 것이라기보다도 是非, 우열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경향은 우리가 소통적 이해(理解)보다는 배타적 규정(規定)에 물들어 있다는 의구심마저 불러 일으킨다. 때이른 판

단일지 모르나, 이해의 소박성은 소박한 주체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라 보여진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현재 지식인의 태도가 개화지식인들에 비해 반드시 나아졌다고 볼 수 없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정치학은 소통의 부재현상을 타파해야 한다. 동일한 문제의 식과 동일한 작업의 무한반복이라는 한국정치학의 소모전은 바로 상호간의 토론과 논쟁의 부재현상의 극복을 통해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정치학자 상호간의 불통은 그동안 정치학의 성과를 음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서로의 글에 대한 비판과 상이한 입장에 대한 논쟁 등의 보다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점차 소통을 확장해 가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기준의 도처에 존재했던 형식적인 발표의 장들을 실질적인 논쟁의 장으로 만들려는 노력이야말로 한국 정치학 및 한국의 정치발전을 위해 가장 소중한 요소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Several Comments on Korean Political Studies: with a Focus on Korea-related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Hong-Woo Kim*

This paper is an outgrowth of critical examinations of Korea-related articles published i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from the first issue of 1966 to the present.

The findings are summed up in three points: first, strong tendencies of over-theorizations and in consequence under-representation of reality in actual studies; second, lack of communications and of vivid debates among opposite standpoints and across the diverse disciplines and thus reiterations of similar arguments at a level not quite different from precedent studies; third, a proposal to break out this permanent lag in Korean political studies and to revitalize Korean Studies, by working out a new conception of the role of Academic Associations and of Research Centers not as bureaucratic organs for redistributing projects and funds, but as living incarnations of the public space for debates among scholars.

* Professor of Political Science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rea: Political Philosophy

Major Publication: "Masao Maruyama on the Tokyo Trial, 1946-48: A Critical Review", presented at the 17th World Congress of IPSA (1997), Seoul, Korea.

tel: 880-6337

fax: 887-4375